

# 이름뿐인 지역의료체계 문제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최근 발표한 90년도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만성전염성 질환인 폐결핵과 성병은 유병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순환계질환, 간질환, 당뇨병등 만성퇴행성 질환은 계속 증가일로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 수검인원 1만명당 유병률이 1백2십명으로 88년도와 비교해 12명이 증가했으며 지난 10년동안의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해보면 1만명당 유병률이 연평균 7.5%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

## 만성질환 교육사업 중요성 인식 필요

의학계에서는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퇴행성 질환이 이처럼 계속 늘어나는 원인으로 먼저 생활패턴의 변화를 꼽는다. 즉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야기된 영양분의 과잉섭취, 운동부족과 더불어 복잡한 사회생

활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가 유병률을 부추기는 주요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요즘들어 보건소등 공공의료의 역점사업이 결핵, 가족계획, 모자보건등 전염성 질환 중심에서 노인질환, 성인질환, 농약이나 농기구 사고를 비롯한 직업성 질환등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분야로 전환되고 있다는데서 이해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당뇨병등 만성질환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전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의학계는 물론 사회일각에서는 나름대로 계몽과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등 대책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이중 각병원에 개설돼 있는 당뇨병 교육실은 비교적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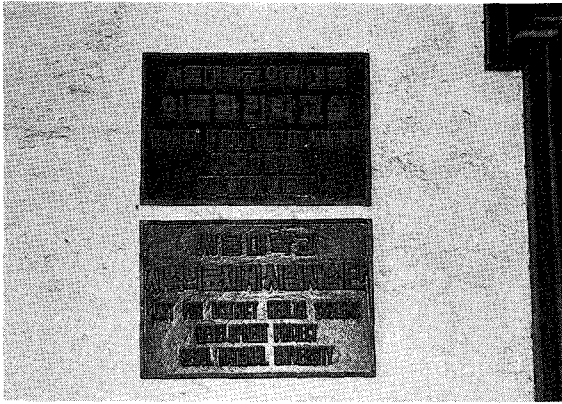
당뇨병이 환자 및 보호자의 교육을 통해 치료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로 이미 여러가지 연구를 통해 입증돼왔다.

국립의료원 유형준박사에 따르면 당뇨병은 다른 질병과 달리 그 병에 대해 많이 알수록 뚜렷한 이득을 얻는 특성을 갖고있어서 배우면 배울수록 치료를 용이하게 한다고. 그 예로 미국의 밀러박사는 당뇨병환자들을 교육시킨 후 2년 뒤에 그들의 합병증 발생유무를 조사해 보았더니 교육을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1/3로 줄었음을 확인했다는 것.

## 당뇨교육 절대적 부족 및 편중화 심해

국내에서는 국립의료원에서 당뇨병교육의 효과를 연구해본 결과, 역시 당뇨병에 의한 발의 괴사(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이 썩어들어 가는 현상) 발생에 따른 절단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혀 당뇨병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당뇨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목적으로 마련된 당뇨병교육실은



서울의대에 설치돼 있는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

전국에 약 98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육시간이 주1회인 곳이 69개 곳으로 전체의 70.4%인데 반해 주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15개 곳으로 전체의 15.3%에 불과해 교육시간의 절대적 부족이 심각한 상태.

그나마 15개 곳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3개 곳이 서울지역에 편중돼 있어 극심한 도시편중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98개의 당뇨교실 중 75개 곳이 대학부속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에 개설돼 있어 3차 진료기관의 고유목적성을 흐려놓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더욱이 교육스텝진의 활발한 연구성파로 당뇨교육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진부한 교육내용과

성실치 못한 진행, 교육재료 등 제반설비 부족으로 환자·보호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1인 의사에 배당되는 환자수 너무 많아

뿐만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의 진료상황을 점검해볼 때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에서 발표한 의료기관의 진료상황을 보면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월 진료비가 2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1천3백3십군데를 대상으로 한명의 의사가 하루에 보는

환자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평균 1백 54.5명이라는 숫자가 산출됐다.

이러한 수치는 의사가 다른 일은 하지않고 계속 환자의 진료만 한다고 가정할 때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3분52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는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진은 과다하고 무리한 진료행위를 하고 있어 당뇨교육과 같은 부대 교육사업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 및 사회 일각에서는 당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산하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1차 진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해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홍보와 계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개선의 소리가 높다.

### 지역의료체계 이제 부화 단계

하지만 공공의료기관도 국민의 건강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기초적인 진료행위마저 박차할 정도로 낙후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의료체계는 각 군단위에

## 기획취재

보건소가 설치돼 있고, 1개 면 소재지마다 보건지소가 있으며 군내에서도 거리가 먼 오지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어 2~3개의 리를 관할하고 있다.

보건사회부 지역의료과 보건소담당직원에 따르면 면단위지역에 개설돼 있는 보건지소의 경우 부산 5개소, 인천 3개소, 광주 9개소, 대전 5개소, 경기도 162개소, 강원도 91개소, 충북 93개소, 충남 159개소, 전북 145개소, 전남 214개소, 경북 228개소, 경남 204개소, 제주 11개소로 총 1329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각 보건지소에 소속된 진료요원은 군복무대신 3년동안 진료활동을 해야하는 공중보건의, 치과의, 치과위생사, 보건진료원과 보건담당직원등 5~6명이 고작으로 면내 주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공공의료기관임을 무색케할 지경이다.

이런 여건속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의료는 어떤 형태이며 이에따른 바람직한 보건사업 개발연구를 위해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을 구성, 발원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

---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연구단계로 지난해에야 비로소 보건사회부 보건국소속의 질병관리과가 신설돼 당뇨병등 만성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연구조정실장인 김용익 박사는 최근들어 질병패턴이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향후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교육 지침서로 제작돼 정부추진사업의 형태로 공공의료에 적용된다면 이들 질환의 예방과 관리는 일대 전환점을 맞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역주민 의료연구 활성화 시기

지역의료체계를 통한 진료활동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싱가포르등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가까운 일본만 해도 매우 다양하게 프로그램화 되어있

어서 당뇨병은 물론 심지어 말더듬는 사람을 위한 교육이 별도로 시행될 정도의 체계화를 갖추고 있다는 것.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연구단계로 지난해에야 비로소 보건사회부 보건국소속의 질병관리과가 신설돼 당뇨병등 만성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서울의대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으로 묶여진 연천의료원은 지난 90년 10월부터 당뇨병클리닉을 개설, 현재 4백여명의 당뇨병환자가 등록돼 관리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연천의료원의 박용수 내과과장은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1차 의료기관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당뇨교육은 첫째, 같은 지역거주로 지리적으로 환자에게 접근기 쉽고 둘째, 질병을 발견했을 때 감시·관리하기가 쉬우며, 셋째, 대상이 작고 환자교육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추후관리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사회의 의료관리는 집단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사후 치료관리, 3차예방으로서 재활과 복지사업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교육을 주축으로 그 지역의 제반여건과 주민의 입장에서 조직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정부의 의료정책 마련이 시급

이제 공공의료는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각 지역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새로이 구축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는 그 증가추세와 질환적 특이성에 비해 당면과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우선순위를 두어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당뇨병교육 관리지침 마련과 업무증대에 따른 인력확보다. 문제의 포괄성으로 보아 해결의 주체는 결국 정부기관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 다시 말해 보건사회부의 의료정책은 가히 졸속행정과 안일무사주의라는 비판을 면치못하고 있다. 당뇨병만해도 제대로 된 통계 자료조차 변변치못한게 우리



연천의료원 전경

네 의료정책의 현주소인 셈이다.

또한 당뇨병교육에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일선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당뇨병 재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요건. 이점에 있어서는 국내 당뇨병 연구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당뇨병학회의 정책사업으로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일반국민의 의식전환도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등 대도시의 종합병원을 전적으로 맹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심지어는 어느 당뇨환자는 죽기전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한번

받아보는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소위 대도시 큰병원을 선호한다.

### 상호 신뢰감 회복이 관건

의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고 넓게 패여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때문에 문제 해결의 열쇠로 국민과 일선 의료기관과의 신뢰감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다만 이러한 핫이슈를 가장 빠르고 부드럽게 해결하는 방법은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들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체계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씩 연결고리를 풀어나가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

<聞>